

이전 비용 '기부 대 양여' 방식...광주시 3조원 어떻게 마련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

대체부지 선정 주민투표 비용마련까지 산넘어 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년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광주에서 이번 특별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3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주민투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대체 부지 선정은 어떻게 = 군공항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군사 작전 등을 고려해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광주·전남이 군사작전 지역인만큼 전남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 후보지는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 항공기의 자유로운 이·착륙과 훈련 공역 등 전술 부분과 소음 피해를 감안해야 하고, 지자체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남지역 내 이전 대상 후보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 이전 최적지로 무안국제공항이 공식 거론됐다가 무안군과 주민들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용역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대체지역으로 인근 서해안 지역이 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0년 가까이 광주시민에게 전투기 소음 피해를 안겨준 광주 군용비행장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간 도로에서 바라본 군비행장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땅값 비싼 대구·수원 부지 매각시 7조·9조 남지만 광주공항은 2조 3천억 부족... “국가예산 투입해야”

적지이며, 무안공항도 그 중 한곳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군 공항을 분리해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공항과 묶어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안공항의 사례처럼 군 전투기의 소음피해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군 공항 설치를 환영하는 지역민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이전 비용 마련은 어떻게 =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공군 제1전투비행단(K-57)은 지난 1964년 광주시 광산구 도호동·신촌동 일원 585만 4000㎡(177만평)부지에, 4년 뒤인 1968년 광주공항터미널 등 민항부분이 인근 15만1000㎡(4만 6000평)부지에 들어섰다.

민항부분을 제외한 광주 군 공항 토지 매각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7100억원대로 추정되며, 신규 군 공항 건설비는 3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을 매각하더라도 2조 2900억원의 금액이 부족하다. 반면 대구와 수원은 상대적으로 군 공항 부지의 땅값이 높아 건설비용을 3조원씩 빼더라도 각각 7조7000억원과 9조3000억원이 남는다.

결국, 이전 비용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면 광주 군공항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전부지를 사들인 뒤 공항시설을 갖춰 국

방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방부는 현 광주 군공항의 땅값을 감정평가해 광주시가 이전공항 부지에 쓴 예산과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광주 군공항의 땅값이 최소 3조원이 넘어야 군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치적 해결 등을 통해 국방부에서 차액을 보충해 준다면 광주에서 우선 3조

원을 들여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상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국가시설 군공항의 경우 특별회계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또 자치단체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면 일정 기간(2년)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법안처럼 시한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도 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현황



-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호동·신촌동 일원
- 부대명: 공군 제1전투비행단(K-57)
- 설치년도: 1964년(민항취항 1968년)
- 부지면적: 585만 4천㎡(177만평)
- 공항터미널 등 민항부분 15만1천㎡(4만6천평)
- 활주로 구역: 2835m × 45m × 2면
- 이전 예상 비용: 3조원
- 공항부지 매각예산 비용: 7139억원

● 특별법 추진 일정	
2004. 9.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8. 12.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종합발전 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
2010. 7.	정부 부처 합동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소음감소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1. 2.	국회 ‘공항대책 특위’ 구성
2011. 3.	민주당·민관 합동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광주지역 대책위원회’ 결성
2011. 4.	공항대책 특위,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비행장 이전 촉구
2011. 5.	국회 군공항소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법’ 공청회
2011. 6.	‘군공항이전 특별법’ 법안심사소위 개최
2011. 12.	‘군공항이전 특별법’ 발의
2012. 5.	‘군공항이전 특별법’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12. 5.	‘군공항이전 특별법’ 재발의
2012. 11.	‘군공항이전 특별법’ 국회국방위 통과
2013. 3. 4.	‘군공항이전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13. 3. 5.	‘군공항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공항 이전 완료 최소 10년... 민간공항은 그대로

이전 얼마나 걸리나

5일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군 공항 이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심의하는데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부지가 확정된 뒤 관련 부대 시설 이전 등에 7~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전 대상 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투표 과정이 남아있는데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군 공항 이전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민주·광산 갑) 의원은 5일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군 공항 이전 완료까지는 10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광주공항은 빠르면 2022년께나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또 “군 공항 이전 지역으

로는 소음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이 적지라는 점에서 무안공항 인근 지역이 주민 수가 적고 안개도 적어 최적지”라며 “하지만 주민투표가 관건인 만큼 이전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더라도 민간 공항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과 별도로 광주공항 준치는 광주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광주공항은 그대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반세기 주민 숙원사업 해결 물꼬... 일단 환영”

광주 광산구 반음

광주 광산구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지 군 공항 이전은 예산,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이견 등이 얽혀 쉽지 않은 문제였다”며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반세기 동안 주민 숙

원사업이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 2004년 김동철 의원(민주통합·광주 광산구갑)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9년 만에 얻은 성과”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는 다만 이전 후보지 선정에서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부지를 건의할 때 이전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軍)에 기부할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대양여’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정부 상고는 적반하장” 광산구 주민대책위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의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판결에 대한 정부의 대법원 상고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십 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결정할 법원의 판결을 놓고 정부는 항소와 상고를 통해 피해지역을 축소하고 보상금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어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대책과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의지도 없는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염치로 대법원에 항소하느냐”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www.kdic.or.kr
www.facebook.com/happykdic
twitter.com/happykdic
blog.naver.com/happykdic



예금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가족의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소중한 예금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 1588-0037

5천만원 초과금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